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진실된 사과와 진상규명, 사고를 불러온 안전규제완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민영화 중단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시민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생환할 수 있도록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전’을 강조해온 정부인만큼, 모든 것을 다해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의 추모와 더불어, 사상 초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반성과, 정부의 분명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분별한 안전 규제 완화, 각종 협회와 안전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 낙하산 인사, 안전 관리와 사고 대처의 민영화 정책입니다. 모두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 문제가 불거진 정부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관료 낙하산은 공공기관 운영 왜곡의 주범인데도 ‘중점관리 공공기관’ 기관장 과반수가 이들로 채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정책의 개선은 올바른 개혁방안으로서 저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개혁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방지하지 못했던 점 역시 반성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정부 정책의 올바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늦었지만 사과를 비롯한 진실한 반성을 포함하여, 지금이라도 잘 못된 안전 규제 완화, 낙하산 인사, 민영화 정책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추모 및 희생자 생환 기원 촛불집회에 퇴근 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손 모아 실종자 생환을 기원합니다.

*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각 연맹 가맹산하 단위노조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되는 추모 및 실종자 생환기원 촛불에 모든 조합원이 한번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촛불 시간·장소는 양대노총 및 각 연맹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해주시십시오.

2014.5.7.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